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목차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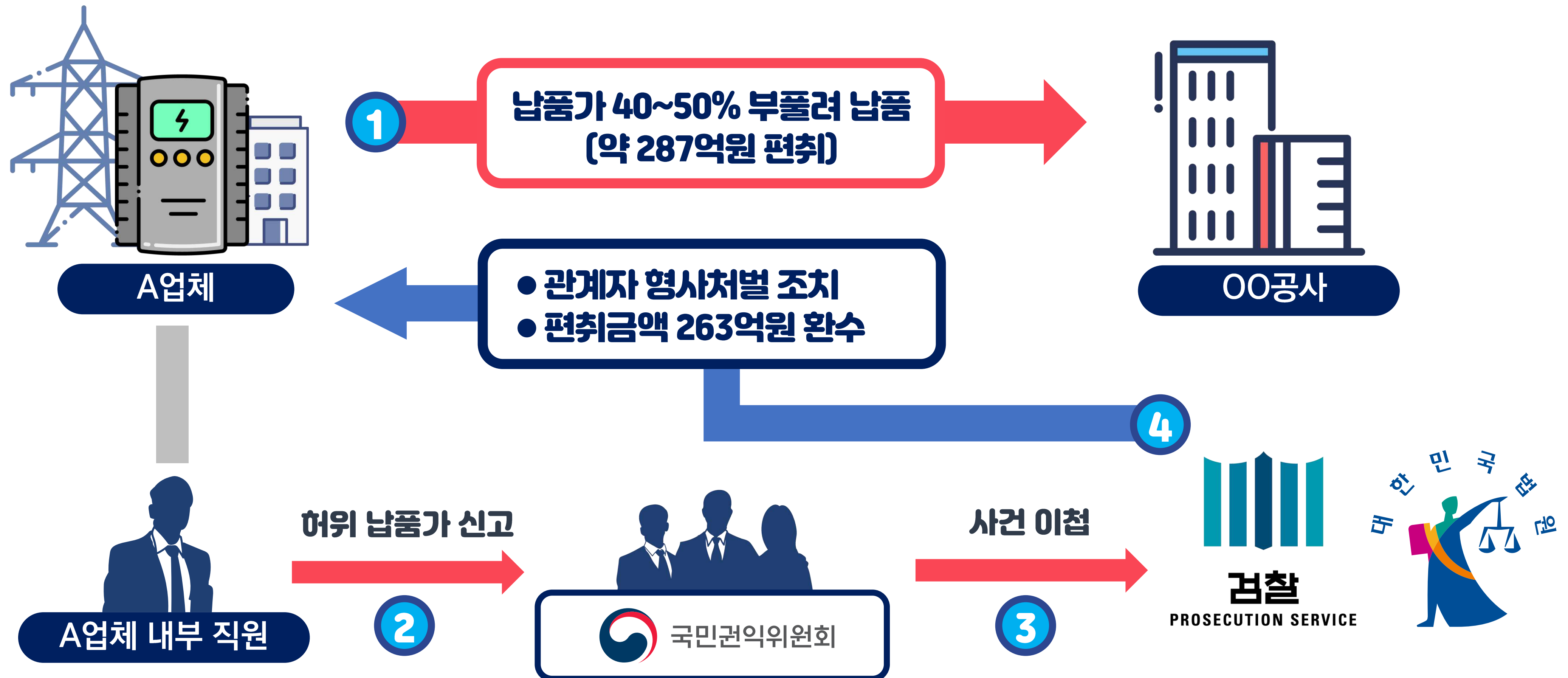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사례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부패신고 사례



# 공익신고 사례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 부패행위

**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 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 나** 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각종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및 수사의 단서 제공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건강**

무자격  
의료행위

불량식품  
제조·판매



**안전**

부실시공


책임감리  
불성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매립



**소비자이익**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공정경쟁**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이에 준하는 공익**

채용 청탁·강요

거짓  
채용광고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 ‘신고성 민원’이란?

 **신고성 민원**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민원

부패·공익신고 전용창구가 아닌  
각종 민원창구(예:국민신문고)로 접수 시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에 해당

 **신고의 중요성**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Step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 부패·공익신고의 필요성



부패·공익 신고제도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부패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방지





## Step 2

#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부패·공익신고 주체 및 신고기관

##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제67조

공직자의 부패신고 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 부패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감사원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국회·법원 증언의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신고자 보호 가능

## 공익침해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국회의원

\*각 신고기관별 '부패신고책임관·공익신고책임관' 지정·운영 필요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부패·공익신고 방법 : 기명(실명)신고

## 기명(실명)의 문서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첨부



##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방문·우편·FAX(044-200-7972)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398(상담만 가능)

###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 신고의 취지와 내용
- 신분공개 동의 여부



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방법이 아니므로 보호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 공익신고 방법 : 비실명 대리신고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공익신고만 가능)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국민권익위원회**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쉬워!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공익신고는 하고 싶은데, 신분노출이 걱정되신다고요?  
이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공익신고로 사회는 한층 더 밝아지고, 공익신고자 비밀도 보장되니 걱정 없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 1 공익신고자 - 변호사 선임
- 2 변호사 -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 3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신고자 인적사항 서류 봉인)

내부 공익신고자는 일반 변호사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79명)를 통해서도 상담과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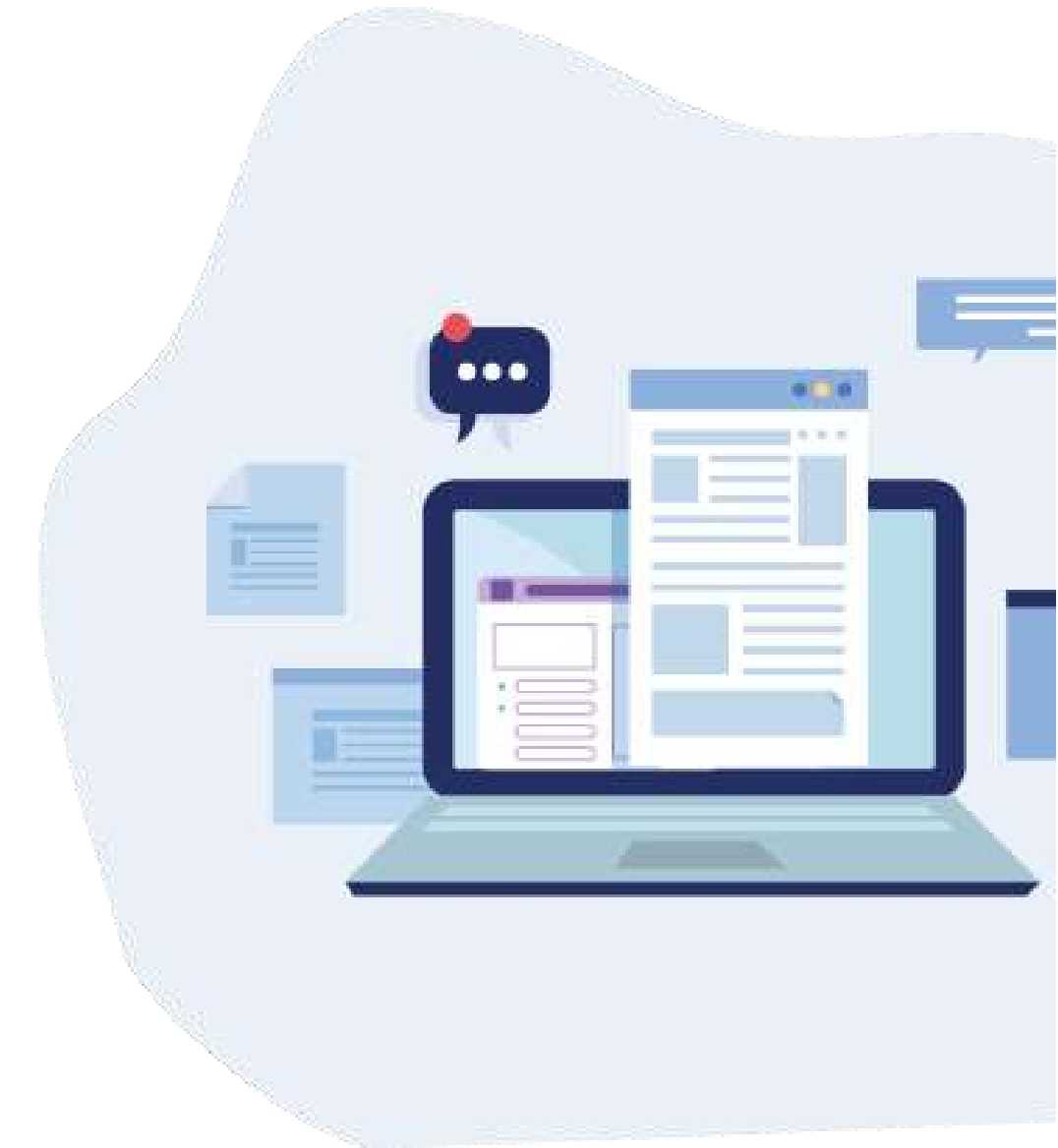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운영



## [ 비용 No~, 걱정 No! ]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중 (2021년 3월 기준 78명)



**내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 ①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
- ②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와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 ③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 교육·훈련
- ④ 피신고자(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 ⑤ 피신고자(기업, 법인) 계열회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 ⑥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관리·감독 받는 자로서, 불이익 조치 받을 수 있는 자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부패·공익신고 처리절차

## 위원회 접수사건



-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대상 및 증거 제시

- 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 필요 시 보완 요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 해당기관에 이첩·송부 등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종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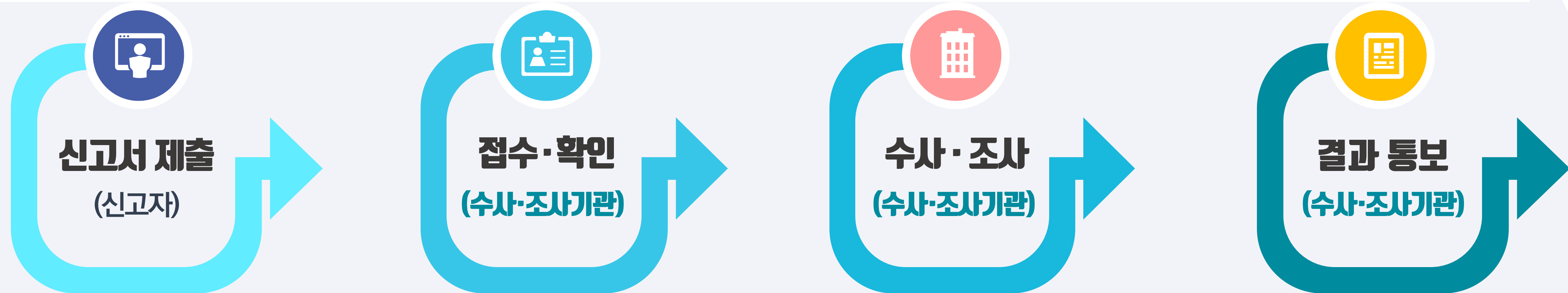
- 수사·조사실시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수사·조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Step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 부패·공익신고 처리절차

## 수사·조사기관 접수사건



-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대상 및 증거 제시

- 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 필요 시 보완 요구

-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수사·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관할이 아닐 경우 신고자 동의를  
구하여 해당 수사·조사 기관에 이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종결 처리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신고처리 중점사항



- 신고자나 협조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공개·보도 금지**  
\*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피신고자 인적사항 포함) 공개 금지
-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이름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 반드시 삭제 !!!**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 /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보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문',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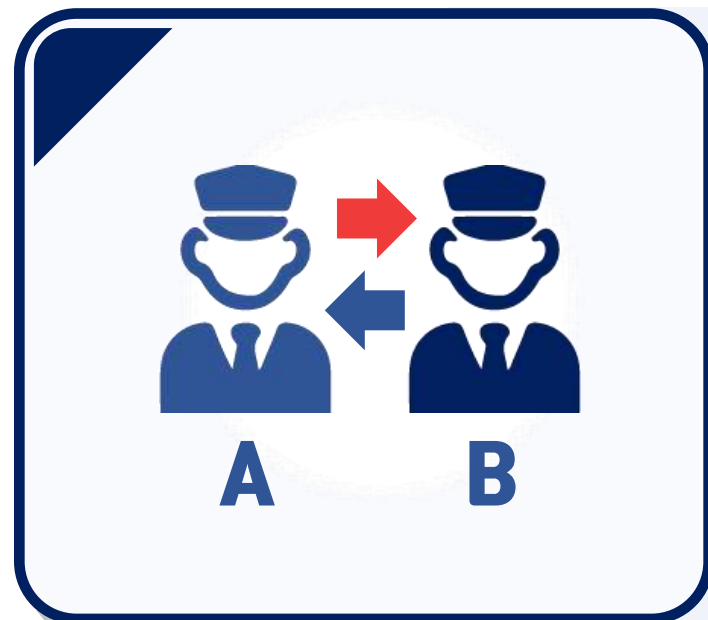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신고자 신분유출 사례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부패신고 사례



## 공직자 사익도모 행위

경찰공무원인 피신고자 A는 동일 경찰서 타 부서 직원인 피신고자 B에게 친형의 사건의 무마를 부탁함 또한 사건 종결의 대가로 모범선행 경찰관 선발 시 피신고자 B를 추천하고 허위의 공적조서를 작성한 의혹을 신고



## 사립유치원 원장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립유치원 원장 D는 재직기간 중 유치원에 근무 하지 않은 배우자를 행정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배우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가 퇴사 처리하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당 명목으로 사학연금 516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부패신고 사례



## 소송비용 회수 관련 업무 해태

E공공기관의 법무담당자는 E공공기관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힘



## 출장 여비 과다 수령

공무원 F는 4시간 이상 출장을 신청한 후 출장이 일찍 끝나 조기 복귀하였음에도 복무상황을 변경하지 않고 출장 여비를 과다 수령하였음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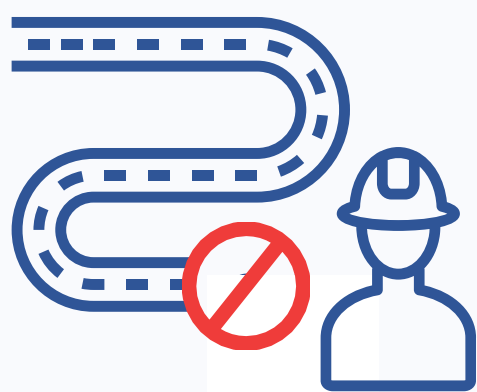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공익신고 사례



## 〈건강분야〉 마약류 관리 부실

B대학병원 소속 A요양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접수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사용하였다고 신고



## 〈안전분야〉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

신항 도로공사 중 D지역 계곡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신고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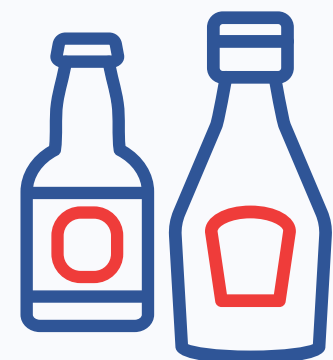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공익신고 사례



## 〈환경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정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내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신고



## 〈소비자이익 분야〉 수입산 유채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E업체에서 수입 유채씨를 이용해 카놀라유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신고

**Step 3**  
신고처리 중점사항  
및 신고 사례

# 공익신고 사례



## 〈공정경쟁 분야〉 제조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각각 어느 정도 낙찰 받을지 물량을 미리 정한 후, 국내 기계업체들이 구매입찰마다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였다고 신고



## 〈이에 준하는 공익 분야〉 공공기관 임원의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채용 요구

공공기관 임원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몇몇 인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용역업체에서 인사담당자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친척이 채용되도록 부탁하였고, 용역업체 인사담당자는 내부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친척을 채용한 사실을 신고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 신고자 보호 강화!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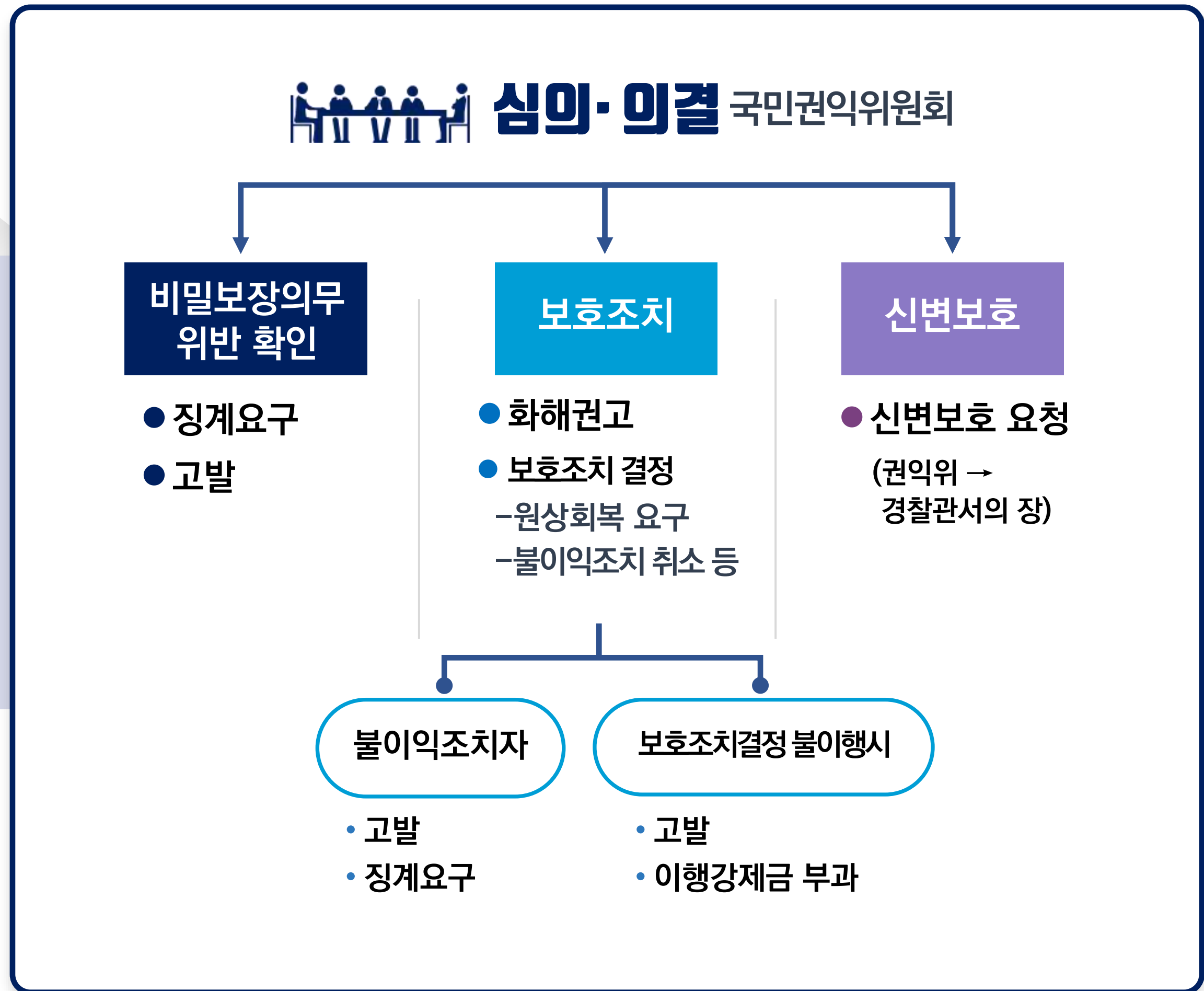
# 보호신청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신고자(협조자)

-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 보호조치 신청
- 신변보호 요청

**조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 관련자 등 조사·확인 조사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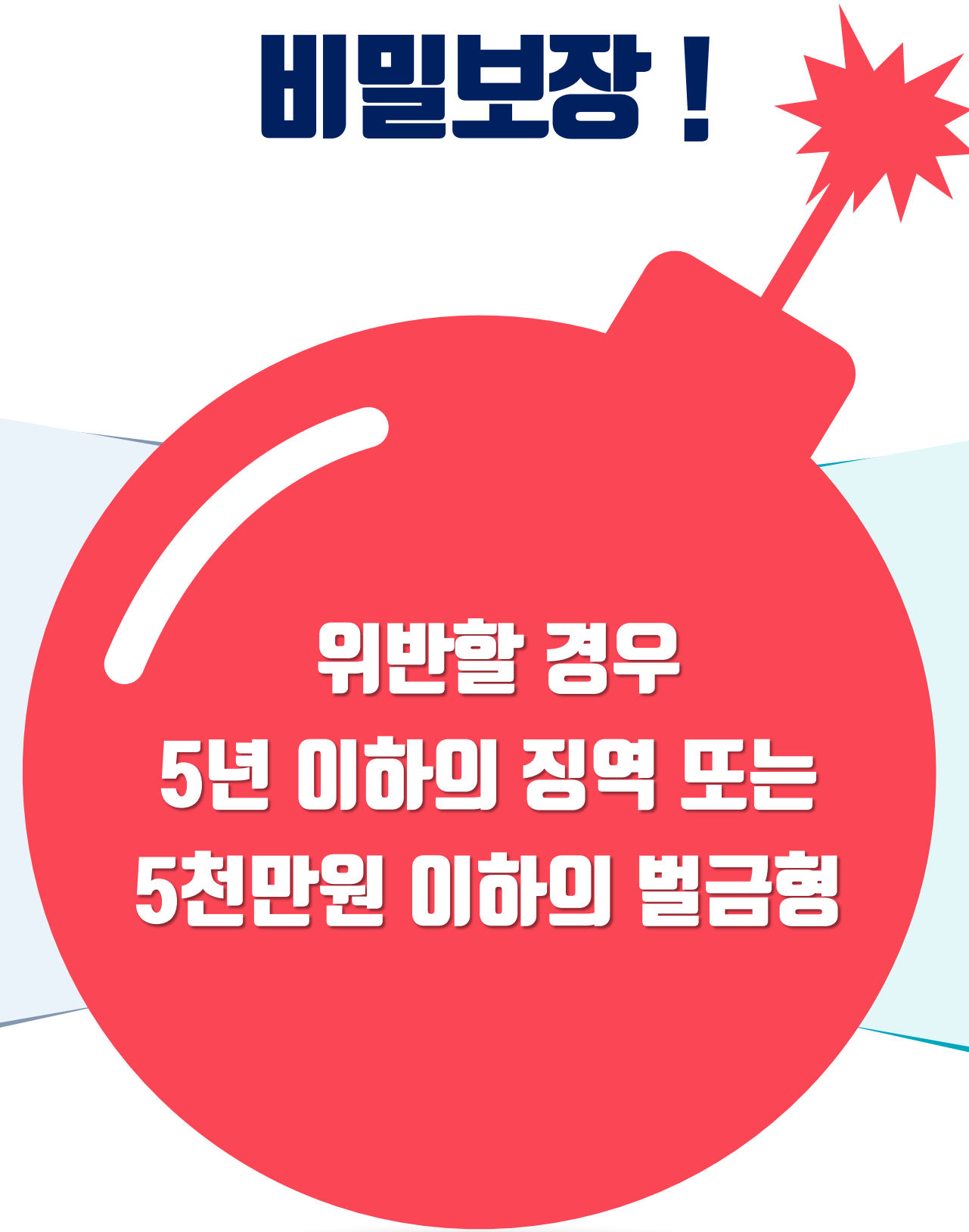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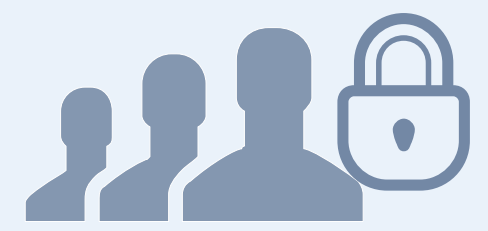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 비밀보장!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부패신고 사례


##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요구

A공사의 공사비를  
부풀려 처리하게 하는 등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




**부패신고자**

A공사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부패신고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진정서를  
공문에 첨부




**신고처리담당자**

신고처리 담당자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요구



**부패신고자**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신고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공익신고 사례

## “경찰의 마약수사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비밀보장임무 위반 확인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항

**!**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신고 방해·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불이익 조치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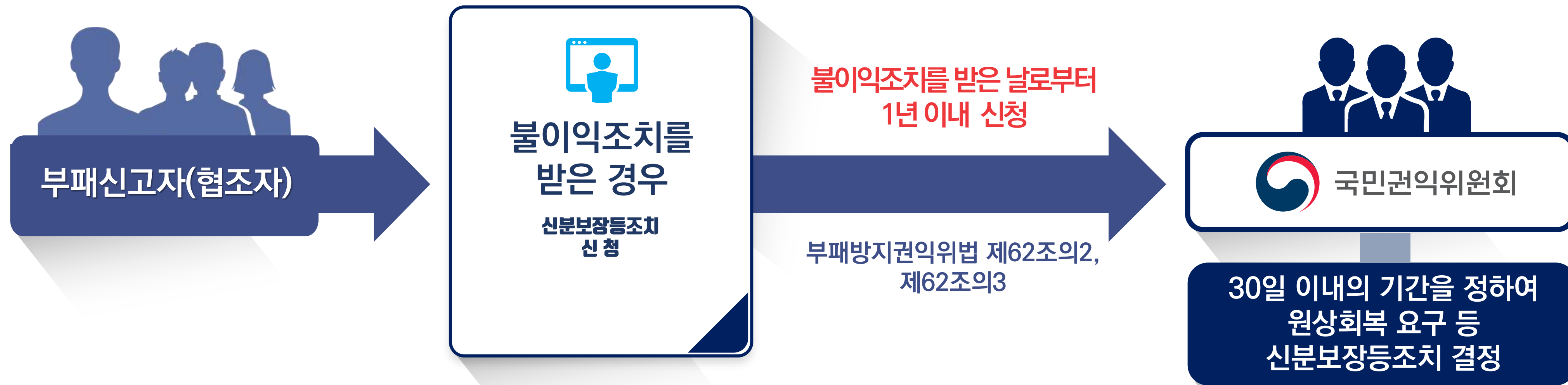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권고사항(벌칙조항 없음)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부패신고자·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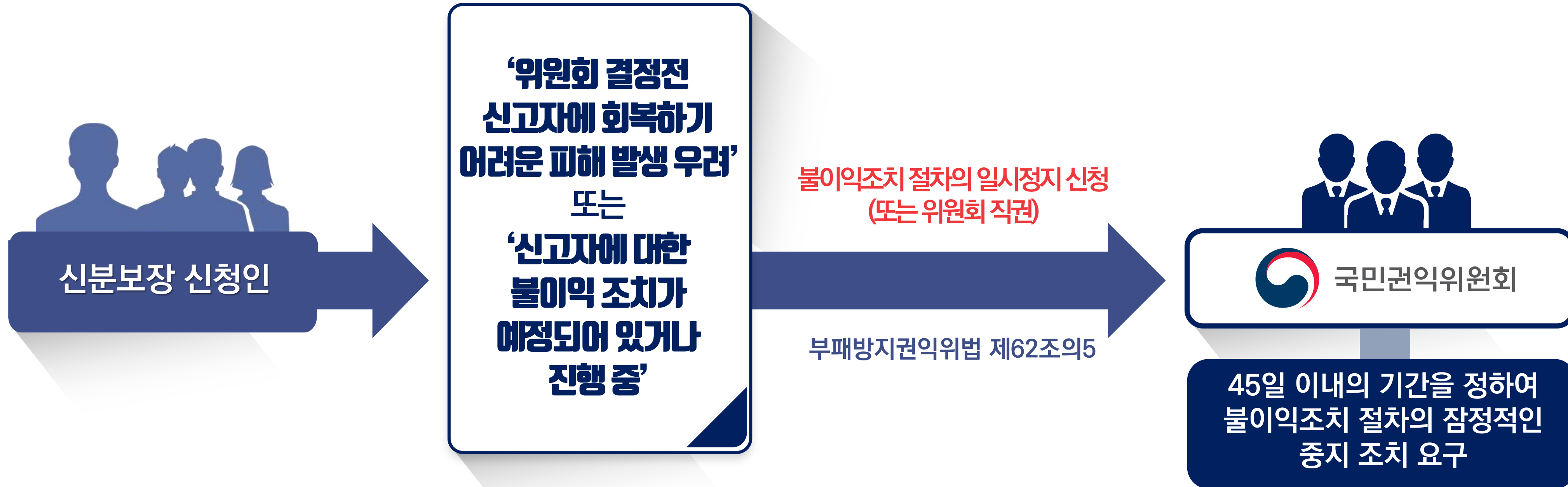
**위반 시 처벌조항**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제90조제1항)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불이익 조치절차의 일시정지(부패신고자·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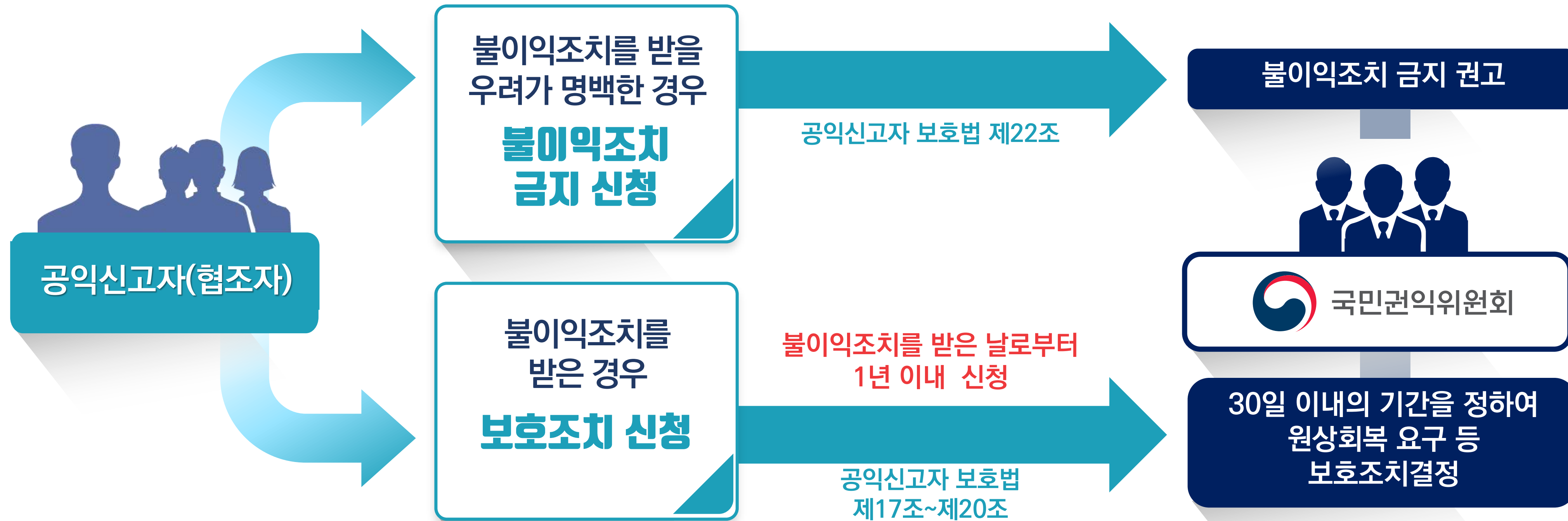



**위반 시 처벌조항**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제3항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보호조치 결정(공익신고자·협조자)




**위반 시 처벌조항**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부패신고 사례

## “신규직원 채용 시험 점수 조작”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원상회복) 신청

○○공사 사장이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



부패신고자




○○공사가 신고자에게  
해임처분




부패신고자





신고자는 권익위에  
해임 처분 취소 및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부패신고자



”  
○○공사 사장에게  
원상회복 요구, 구법 적용에  
따른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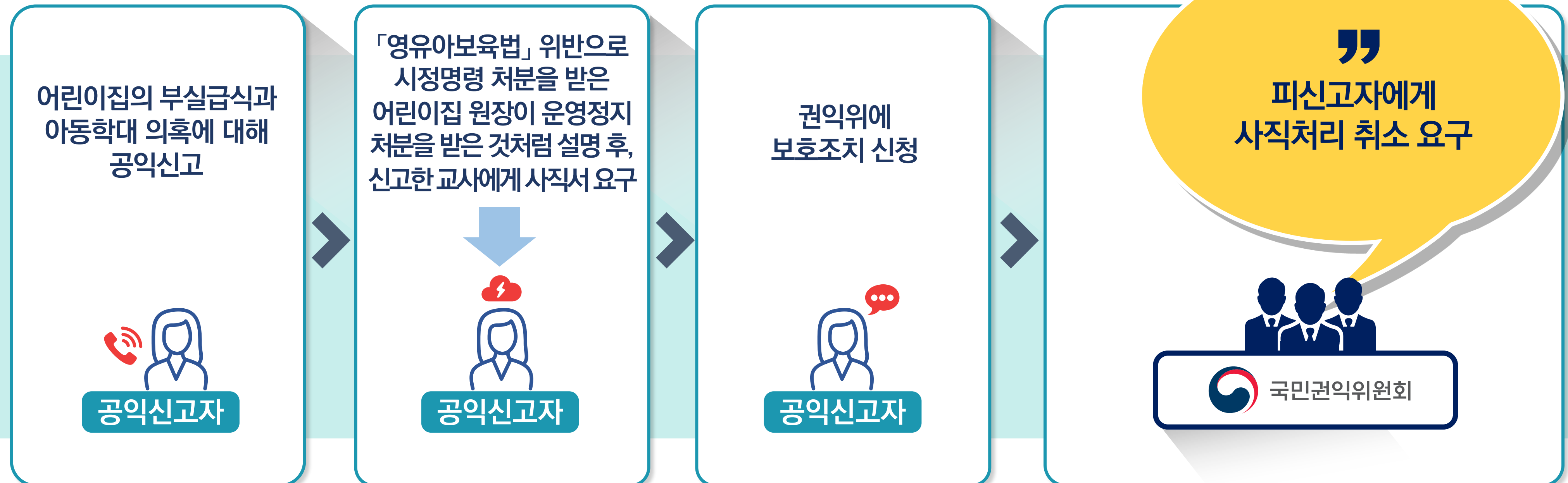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공익신고 사례

## “어린이집 부실 급식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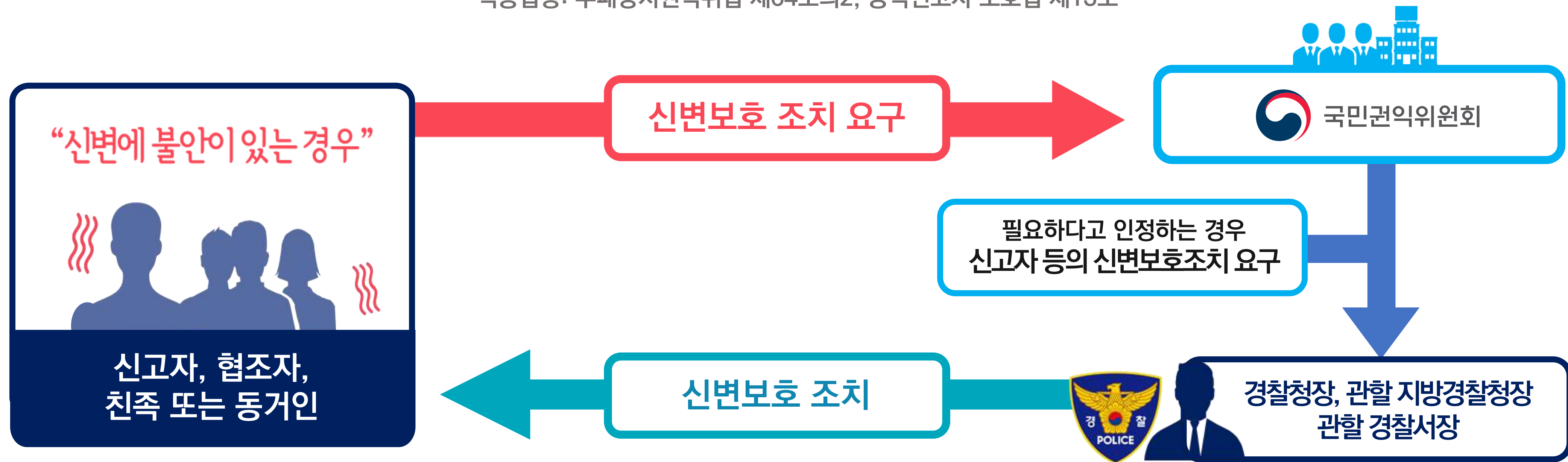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 부패·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신변 보호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변 보호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 부패신고 사례

## “하수관거공사의 시설물 미시공” 신고 관련 신변보호 요청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신변보호 : 공익신고 사례

## “자재구매단가 부담 인상” 신고 관련 신변보호 요청

자재구매단가  
부담인상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




공익신고자

폭력배 동원  
신고취하서 제출 강요,  
신변상 위협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



공익신고자

”  
거주지의 주기적 순찰 등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책임감면

##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형벌의 감경·면제**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공익신고자(협조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경·면제 받을 수 있음(공익신고의 경우만 가능)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패·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청구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공익신고의 경우만 가능)**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책임감면 : 부패신고 사례

##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 신고 관련 책임감면



‘21. 7. 21.부터는 형사·행정·민사소송 등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에 권익위가 법원에 의견 제출 가능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책임감면 : 공익신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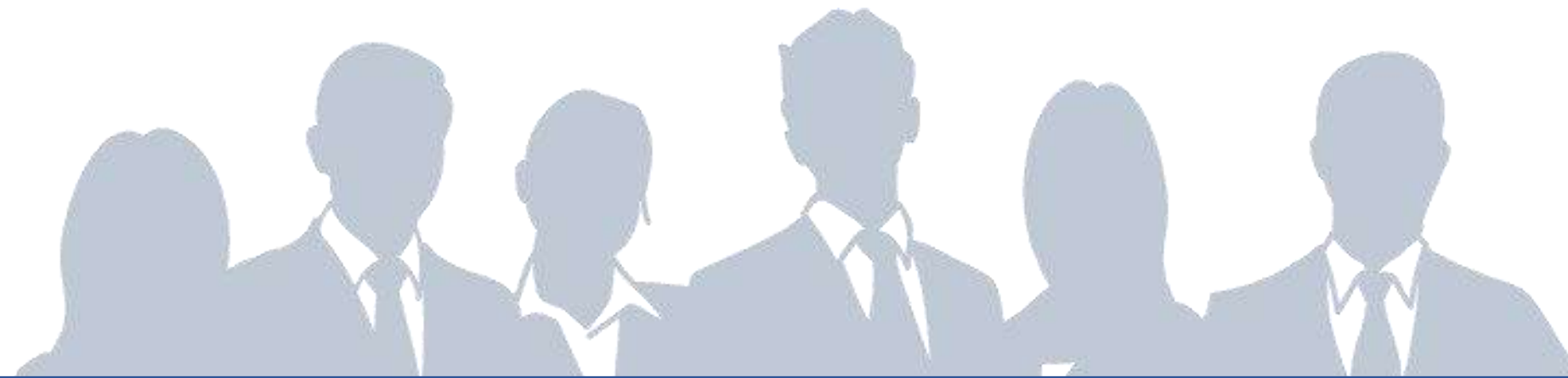
## “입찰 담합행위” 신고 관련 책임감면



Step 4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신고 협조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5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



## 신고 협조자란?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사·조사에 조력한 자**

## 협조자에 대해서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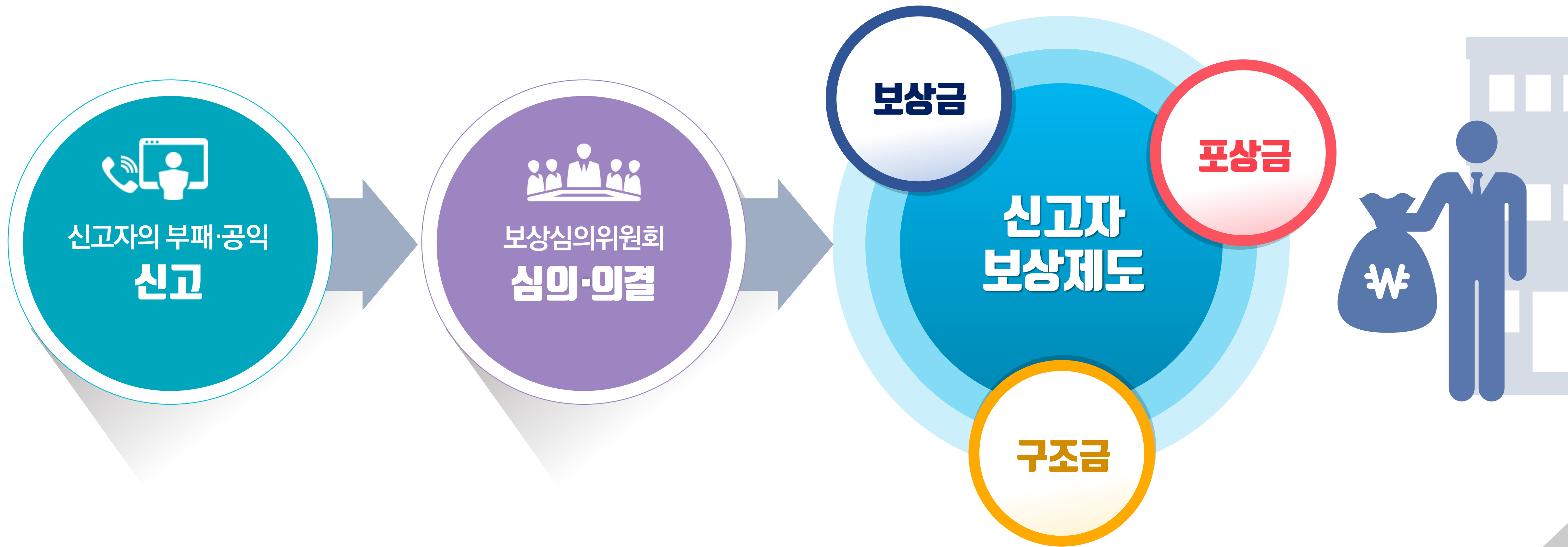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 증진 또는 국가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 지급 !”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  
보상

## 보상금 지급대상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공익신고** 모든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음



# 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추징금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통고처분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 벌칙, 통고 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지급 처리 절차



- 보상금 신청서 제출
- 내부공익신고자 입증자료 제출
- 신고처리결과(공문) 제출
-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제출
- 인터넷/방문/우편/팩스 신청



- 부패·공익신고 처리 행정기관 등에 자료요청 및 제출
- 내부공익신고자 여부,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 조사·확인



-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보'와 '결정통지서' 송부
- 보상금 계좌 입금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보상금 상환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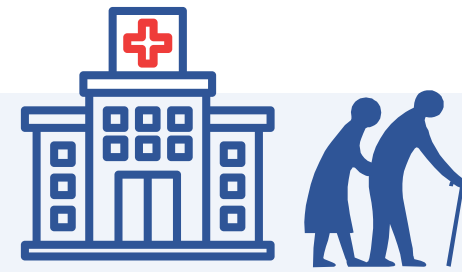


공익신고로 타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더라도, 권익위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차액지급 신청 가능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 지급 사례 : 부패신고자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지급



**허위치료 부정수급 신고**

사무장병원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치료로 거액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A병원을 권익위에 신고



**처리결과**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금 부과,  
병원 지정취소 및 의사자격정지,  
징역 1년 6개월



**2억 306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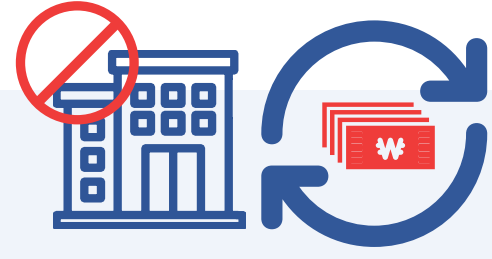
신고로 인하여 80억 4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의  
사실을 인정, 보상금 지급 결정

**주택보급사업  
보조금 편취  
신고**  
보상금 지급



**보조금 부당편취 신고**

지역난방공사 참여 시공업체들이 시공권  
불법 양도 및 허위계약서 통해 보조금  
부당편취 한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



**처리 결과**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금 부과,  
건축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4,828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신고로 인하여 5억 123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결정

**역대 최고 부패신고 보상금 : 11억 6백만원(15년)**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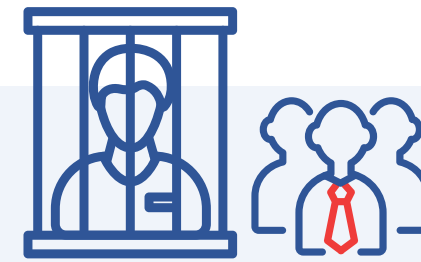
# 보상금 지급 사례 : 공익신고자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신고  
보상금 지급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피신고업체가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관할기관에 신고



### 처리결과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관계자 징역 및 벌금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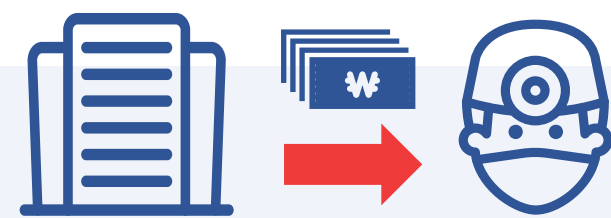
## 1,165만원



### 보상금 지급 결정

건강 분야 공익침해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결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신고  
보상금 지급



### 리베이트 제공 신고

제약사가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관할 검찰청에 신고



### 처리결과

공정거래위반 및 뇌물공여로, 리베이트 제공 회사, 병원 등 관계자 구속 및 입건, 벌금



## 9,600만원



### 보상금 지급 결정

공정거래 분야 공익침해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결정

역대 최고 공익신고 보상금 : 6억 9,200만원('18년)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포상

## 포상금 지급대상

**부패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모든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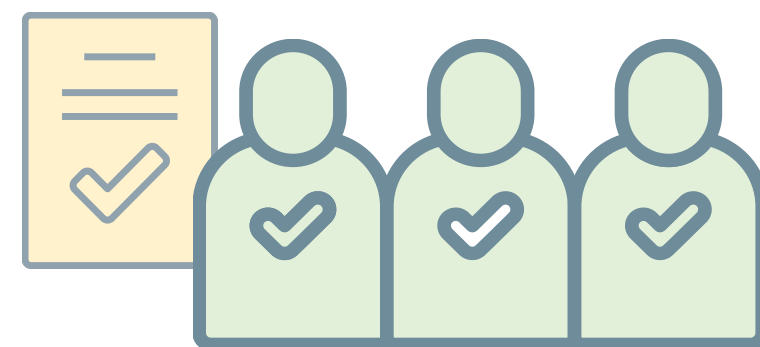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

##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 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



- 기관 추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상시/정기)
- 국민권익위원회 직권 선정

- 추천자료 검토 및 필요 시 자료 보완 요청
-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조사·확인

-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보'와 '결정통지서' 송부
- 포상금 계좌 입금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포상금 지급 사례 : 부패신고자

**장병물품  
납품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군 납품비리 신고**

F회사 등 65개 업체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 부정하게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 편취



**처리결과**

군납비리 관계자 전원 구속 및 입건, 벌금형



**2,2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 포상금 지급 결정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신고**  
포상금 지급



**허위 서류 작성 신고**

G고등학교 교장이 지원사업 보조금을 허위 서류를 작성, 청구하여 편취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이를 묵인했음을 신고



**처리 결과**

G고등학교 교장을 파면하고 보조금 환수 및 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리



**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 포상금 지급 결정

**₩ 역대 최고 부패신고 포상금 : 5,000만원('19년)**

# 포상금 지급 사례 : 공익신고자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의료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불법의료행위 신고**


A병원에서 약물의 오용 및 남용 등 불법의료 행위를 하였음을 신고



**영업정지 3개월**

**처리 결과**

증류수 오용 및 사건 은폐사실이 확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



**아동학대 신고**

아동복지시설인 B보육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왔음을 신고



**처리 결과**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월~징역 2년 및 벌금 600만원 부과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역대 최고 공익신고 포상금 : 2억원('19년)**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자 구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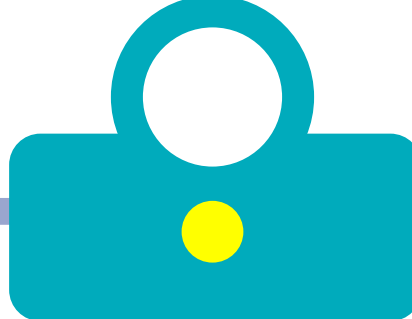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구조금 지급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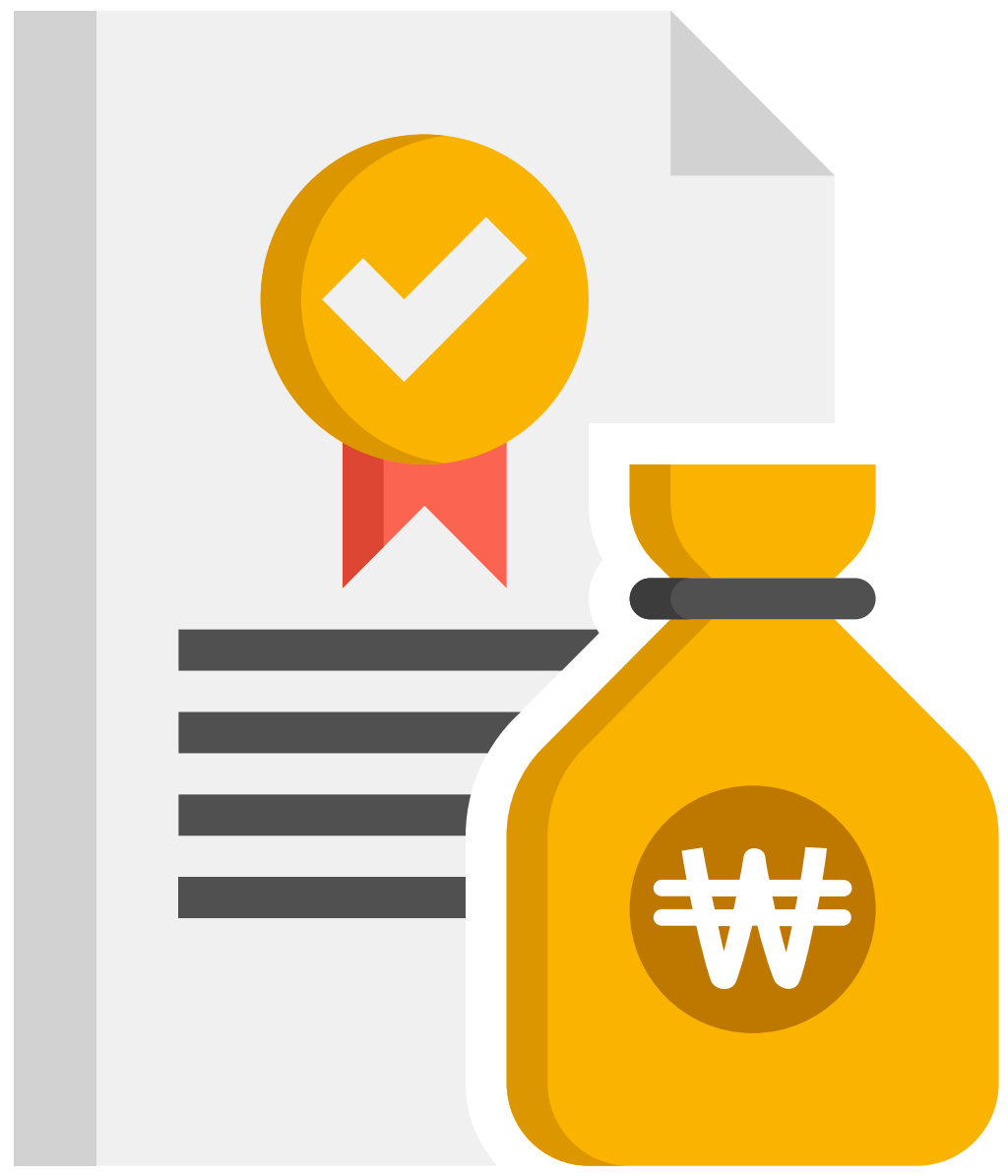
## 긴급구조금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우선 지급 가능  
(공익신고만 해당)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21. 10. 21.부터 원상회복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등  
공익신고 관련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지원 가능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구조금 지급 처리 절차



- 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계좌 사본
- 수급자 증명서 (긴급구조금에 한함)
- 기타 참고자료

-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 구조대상 가액 산정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등 지급대상 여부 등 확인

- 구조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보'와 '결정통지서' 송부
- 구조금 계좌 입금

**Step 5**  
신고자  
보상제도

# 구조금 지급 사례 : 공익신고자

**불량 전분 제조·유통 신고 건**  
구조금 지급



**불량식품 유통 신고**

피신고자가 부패한 재료를 사용해 소맥전분을 제조,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



**구조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 후 신분이 노출, 권유에 의해 퇴사처리됨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1,393만원**



**구조금 지급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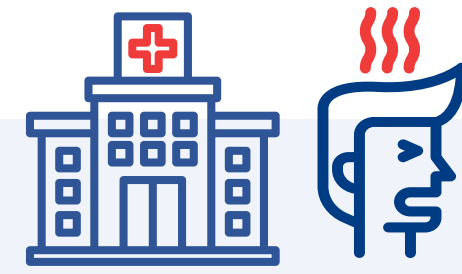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실직상태부터 재취업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입찰비리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입찰비리 신고**

정부연구기관 연구원이 행사용역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적 노무를 강요하였음을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신고



**구조금 지급 신청**

신고 후 강제 전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



**50만원**



**구조금 지급 결정**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진료비에 대해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위험에 빠지는 일로 부패가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부패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한다.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염정공서〉의 임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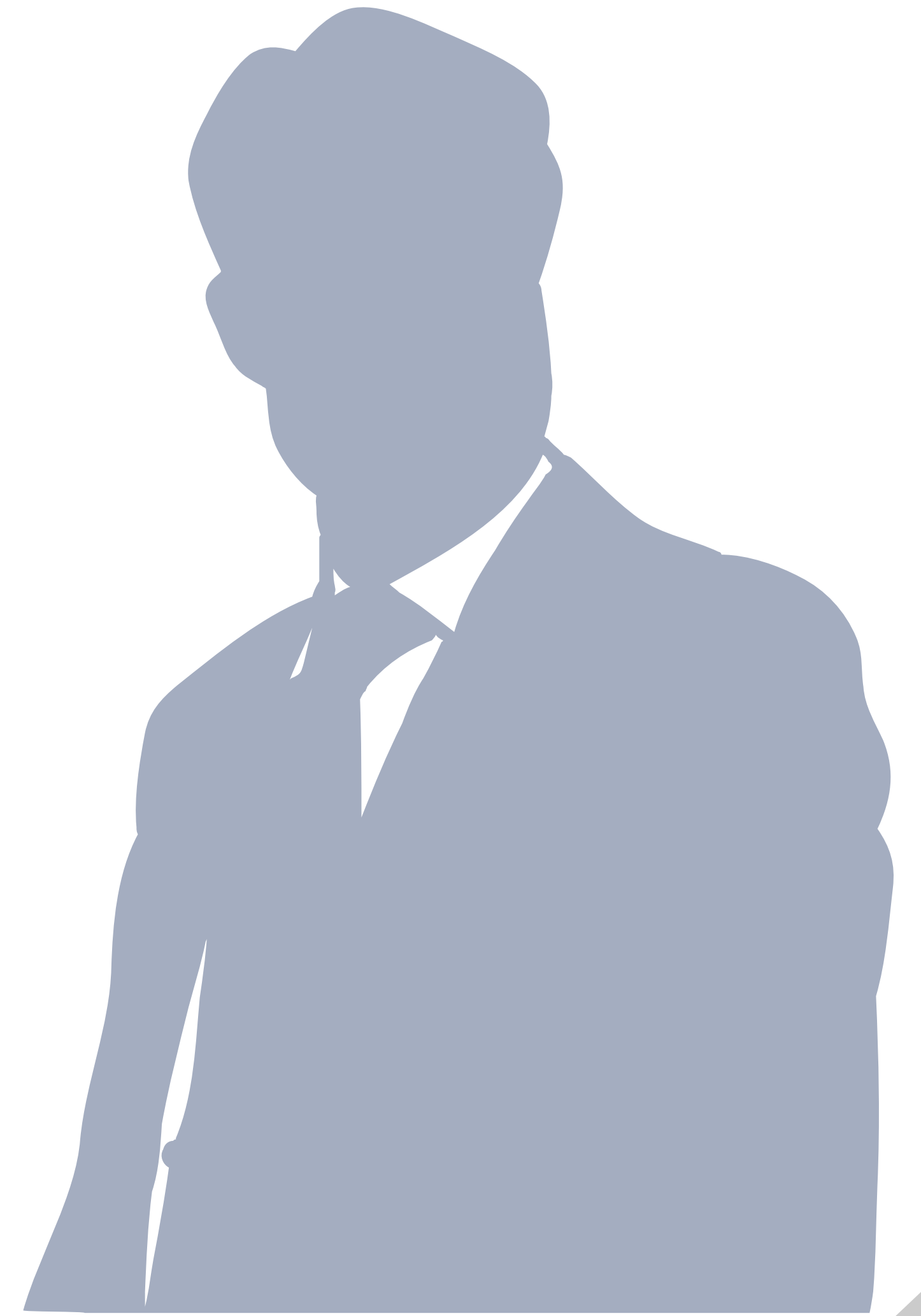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



## “지식인의 책무”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배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식인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승의 ‘과학의 눈으로 본 배신의 정체성’ 중, 한겨레출판 <배신> 2008년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용기,  
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